

“인권상 서훈 막은 이상민 장관 입건은 응당한 처분”

양금덕 할머니 국민훈장 수상 무산
광주시민단체 직무유기 고발 ‘입건’
일제강제동원 모임 “대가 치러야”
광주전남 등 500곳 1인 시위 예정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돼 직무 정지상태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서훈을 막았다는 이유로 입건됐다.

현재 장관이 입건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난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이후로 4년만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 장관이 입건 된 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응당한 처분”이라며 “마땅한 법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22 대한민국 인권상’을 두고 근로정신대 문제 인권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최종 추천했지만 행안부가 해당 추천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수상이 무산됐다.

이에 단체는 지난달 1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공무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13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면담을 요청하는 외교부에 사과와 답변을 먼저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했다. 단체는 고발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 미숙이라고 판단해 질의 민원을 넣었지만 당시 행안부, 외교부, 인권위가 민원을 떠넘기다가 외교부로부터 ‘관계부처 사전 협의 미비로 인해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행안부가 외교부 핑계를 들면서 서훈 절차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분명한 직무유기다”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

다. 이후 지난 9일 세종 남부경찰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았고 이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상훈법 제5조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에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 의안이 현재까지도 국무회의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사전 정부부처끼리 실무협의를 필요하다는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행안부가 대일관계를 고려해 일부러 수상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입건과 관련 고발단체는 “이 장관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보다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을 재개할 목적으로 고발을 진행했다. 만약 인권상 서훈이 다시 추진된다면

고발을 취하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양금덕 할머니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의 입건과 관련 “응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국인 시민모임 대표는 “외교부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상을 막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양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을 가로막는 것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드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마땅한 법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회견에서 국민훈장 수상 무산 관련 민원을 목살하는 외교부의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양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수상 무산 건에 대한 경위를 묻고 이후 대책이 무엇인지 묻는 민원 질의를 했지만 56일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며 “외교부는 면담 요청에 앞서 자신이 해야 할 도리부터 하라”고 질타했다.

시민모임은 이날부터 이틀간 정부가 추진 중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제3차배상안(병준적 채무인수안, 피고기업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해 원고인 피해자에 배상하는 방식)을 강력 규탄하는 1인시위를 전국 500여곳(광주·전남 약 100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글·사진=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5·18단체, 계엄군과 화해 추진... 19일 대국민 공동선언식

5·18 3단체, 서울현충원 방문 계기
5월정신 지속적인 계승 발전 협력
오월어머니집 “수용 거부” 반발

오월단체가 계엄군과의 포용과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예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가해자들의 고백과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행보는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5·18 3단체와 대한민국특전사동

지회는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명령으로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계엄군을 대신한 특전사동지회와 5·18 당사자들이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9일에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선언식’을 열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지속적으로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서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5·18 3단체와 특전사동지회 회장단은 국립서울현충원 합동장배 이후 화합의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공동선언식 행사에서는 5·18 당시 첫 사망자인 고(故) 김경철 유공자의 어머니 임근단 여사와 특전사 출신 장교 임성록씨가 모자(母子) 결연을 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특전사동지회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것을 계기로 합동장배를 정례화한다는 행동강령도 선포할 계획이다.

그러나 오월단체 일부에서는 “국민과 오월영령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곧바로 반발했다. 오월어머니집(관장 김형미)은 기자회견 직후 규탄문을 발표해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가해자들의 고백과 사과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국가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이 발포명령과 암매장의 진실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화해와 용서의 행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오월어머니집은 “계엄군의 군화발

과 총칼에 의해 무참하게 죽어간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어머니들에게 어찌 학살 가해자들을 포용하고 화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회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이처럼 기만적인 행보를 벌인 것에 대해 그 저의를 밝히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내부적으로 공동선언식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대응적 차원에서 화해의 손길을 뻗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반발하는 일부 회원들도 꾸준히 설득해나갈 것”이라며 “공동선언식 행사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주재기자 모집

당사는 지역언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 이상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및 인원

지역	고흥, 담양, 보성
인원	각 1명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명기).....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소개서..... 1부

접수마감 및 접수처

- 접수마감 : 채용시 마감
- 접수처 : 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사 경영본부
- 이메일 접수 - recruit@jnilbo.com
- 기타 사항은 ☎(062)510-042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全南日報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지통 062-519-0710

全南日報

봄에 떠나는 그림을 섬겨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